

타 지자체 앞다퉀 'AI 인재 육성'... 광주 '비상등'

서울시, 연 1만명 양성 '경쟁 치열' 경기·부산·대구·울산도 교육 나서 기업 유치·인력 수급 걸림돌 우려 'AI 2단계 등 인프라 구축 급선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퉀 AI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어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연간 1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내 AI 선도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AI사관학교 등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AI기업 유치를 공을 들여왔는데 서울시가 대규모로 AI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되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SEOUL 2025'에서 '글로벌 AI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민형배·양부남·조인철·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AI 혁신 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 제공

오 시장은 특히 AI산업의 근간인 인재 육성과 관련, 오세훈표 청년일자리 정책 사업인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소재 54개 대학을 연계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20개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올해 말까지 25개로 늘리고 교육과정은 AI 위주로 재편해 연간 4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별 지원도 확대해 AI 관련 학과

를 신·증설하고 대학 지원사업마다 투자를 늘려 연간 6000명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곳을 중심으로 AI 핵심 인재 800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는 총 25곳의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배출하는 핵심인재 숫자를 1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

들도 AI 인재 양성에 뛰어 들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9년까지 4960억원을 투입해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반도체·바이오 등 7대 미래성장산업 선도 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 등 매년 1만1000명씩 5년간 5만5000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라이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만명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부

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 부지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원을 투입해 '대구AI교육센터'를 구축했고, 대전시교육청 역시 올해 AI 융합 교육 중심 고교 4곳과 선도학교 20곳을 선정해 AI 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I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AI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세워 5년 전부터 AI사관학교를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 각 지자체마다 AI산업 및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I 관련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AI 전문인력 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광주시의 기업 유치와 인력 수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조원대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둘러싼 지역간 유치 경쟁도 뜨겁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게 된다면 광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 2면에 계속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70분만 종료

윤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 안밝혀 검찰 "준비된 서면증거만 7만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1시간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은 탐색전 속에 짧게 끝났다. 이어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

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

라고 밝혔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된 1시간10분가량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셨나요?

소소한 생활불편 사항이 있으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7979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친구 맺기로

운영 중인 사업과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문의처 : 남구청 복지정책과 (☎ 062-607-7979)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서비스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복지 콜센터, 찾아가는 7979봉사단, 카카오톡플러스채널, 福주머니

